

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(5.29)

- 지금부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다소 둔화되었습니다.
정부는 가격 안정세가 뚜렷해질 때까지
시장상황을 엄중히 살피며 정책대응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.
-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순위를
주택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
- 1월 29일 발표한 공급방안은 실제 착공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
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.
 - 6,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는
계획수립절차를 통합하는 등 추진일정을 가속화해
착공시기를 당초 계획인 2030년에서 2029년까지 앞당기겠습니다.
 - 2,800호 규모의 동대문구, 은평구 부지도
기관별 이전계획을 연내 조속하게 수립하는 등
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.
- 주택사업 현장의 걸림돌을 확실히 제거하여,
최대한 빠르게 착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 -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약 10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이
PF 자금조달·자재수급 애로 및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
1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.
 - 착공 지연요인을 현장에서 밀착 점검하고,
애로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
 - 이를 위해 국토부 중심으로 관계부처·지자체 등이 참여하는
「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」를
오늘부터 가동합니다.

- 공공 부문에서 공급물량이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, 공공주택 사업의 절차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.
 - 지난 정부에서는 보상, 부지조성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택 인허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사업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이어졌습니다.
 - 정부는 주택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전환한 데 이어, 공사비도 착공시점 기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.
 - 남양주왕숙, 고양창릉, 성남복정 제2지구 등 지연 사업지별로 그 원인을 빈틈없이 점검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.

- 한편, 공급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에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.
 - 국토부를 중심으로 1.29 공급방안에 포함된 신규 주택공급지 인근에서의 투기의심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.
 - 아울러, 수도권 규제지역 등 43개 단지 2만 5천세대에 대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수조사 및 검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
 - 개발정보·부동산가격 등과 관련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포함됩니다.
 - 이에 대해 최대 징역 1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「부동산거래신고법」 개정안이 5월 7일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,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대응의 실효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.

-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